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0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엄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엄태영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건수가 한 40%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하면 질의를 줄여 주시는 것이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인 만큼 참석하신 위원님들 짧게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엄태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엄태영 위원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모시고 회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다음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뭘 최선을 다해요?

○김종양 위원 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다음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인사말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엄태영 예,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니까 간략하게 인사말씀, 각오 이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황운하 위원 예결소위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내실 있는 예결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민생 예산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 분량이 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서면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요구사업에 대해 실국 단위 사업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작성된 소위자

료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청취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위원님 간의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후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12분)

○소위원장 엄태영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자료 3권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정부가 수용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반복 이월 방지 및 공정관리 강화 필요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이 56억 5900만 원인데 이 중에 3억 47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6.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차액인 52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8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국가상징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단계인데 기본조사 설계비 43억 중에 42억 12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이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 등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는데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다음은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시정요구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간에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여러 의견이 있으면 낮은 걸로 하기로 기본 원칙을 정해서……

○정일영 위원 확인 좀.

○소위원장 엄태영 예,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장님, 이게 29년 8월 준공 목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지 공정률은 몇 퍼센트예요? 공사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지금 설계 착수 단계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년, 8년,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게 준공이 되겠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일단 내년 6월까지 설계 마무리하면 저희가 2년 정도, 공사 발주에서 공사까지……

○정일영 위원 그러면 2년인데 됩니까? 건평이 몇 평인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굉장히 힘든 일정입니다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부 협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 저희도 가능하다고……

○정일영 위원 불가능할 거예요, 2년 안에.

건평이 몇 평이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전체 건평은 연면적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박상욱 연면적은 4만㎡입니다. 이게 전체 이전이 아니고요 1단계·2단계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인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짧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원래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합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분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수요처하고 협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률이 6.1%에 그치고 이게 이월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집행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월될 걸 예산을 못 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처가 대통령실이 되고 행복청은 그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그리고 대통령집무실의 건축 설계 등 요청을 저희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통합 설계 공모를 나가자 그렇게 의견을 주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길어졌고 또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 공모를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황운하 위원 행복청의 통제 가능한 일정 밖의 요소로 늦어지고 이월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최형욱**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행복청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복청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행복청 밖의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주의까지 주는 건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어서 계속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번 항목에 대해서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황운하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3번·4번은 수용했기 때문에 5번 항목도 생략하고요. 부대의견 내용을 보시고 부대의견 내용 외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시정요구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구라든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형태로 저희들이 나중에 문구를 종합 정리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위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보류사업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권을 보시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입니다.

먼저 1쪽 보시겠습니다.

1번 부분은 정부가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버추얼 새만금 콘텐츠 품질 및 운영관리 개선 필요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의 새만금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사업인데요. 내역 사업 중에 메타버스 콘텐츠 버추얼 새만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만금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사업 성과지표도 구체화하고 콘텐츠 완성도에 대해서 검수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장종태 위원 등이 제도개선·주의·시정 등의 시정요구유형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쪽 보시겠습니다.

3번·4번은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5번·6번입니다. 5번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의 사전검토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내용입니다.

이게 2025년도 예산현액 253억 9000만 원 중에 93억 정도만 집행하고 그래서 집행률은 37%에 그쳤는데 115억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 44억을 불용했습니다. 이게 물론 주민, 어민단체 협의 등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용수관로 추가 설치 수요 변경 등으로서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등의 사업 준비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취지로 유상범 위원 등이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번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사전검토 실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국전력공사에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65억 4200만 원을.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7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6.4%에 그칩니다.

그리고 예산 확정 이후에도 사업 내용을 변전소 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그래서 행정절차도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당초 2025년 11월 예정이던 게 26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취지로 장종태 위원 등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쪽입니다. 부대의견 내용들은 시정요구 내용 등을 구체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필요할 경우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 간단히 질문, 5번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이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현대차가 거기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차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현대차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차전지 업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현대차 투자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김종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양 위원 새만금 간척박물관 있잖아요. 여기 이용객들이 좀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예, 제법 방문하고 계십니다.

○김종양 위원 이런 건 얼마 정도 오시나요, 이용객들이? 아직 그건 잘 모르시나?

○새만금개발청차장 남영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시정요구유형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2번을 예를 들면 제도개선·주의·시정인데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정일영 위원 몇 번?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2번, 제일 낮은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소위원장 엄태영 제일 낮은 걸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2번 제도개선. 그다음에 5번·6번도 제도개선으로……

○정일영 위원 다 제도개선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 제도개선이고 5번은 주의·시정 둘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2번 제도개선, 5번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6번 역시 제도개선으로 수위를 낮춰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심사 하기 전에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결산기금소위자료 I 권을 보시겠습니다.

국토 분야입니다.

여기가 소관이 기조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주택공급추진본부 소관, 건설정책국 소관인데요. 제가 실·국별로 하나씩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소관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R&D 정산관리 체계 점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신규 R&D 정책 개발하고 다부처 공동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할 수 있는 인건비, 고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2025년까지 정산 대상인 721개 과제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44개 과제가 아직 정산 통보 기준 기한인 9개월을 초과했고, 늦게 통보했고 그리고 138개 과제가 정산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기한 1개월을 도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산 규칙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비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이행보증보험이 있는데 보증 기한은 과제 종료 후 9개월까지 적용하는데 정산·반납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정부 지원금 회수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체 지침에도 근거하고 있어 법규성도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부승찬 위원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것 부승찬 위원이 오늘 오전 중에, 자료상에는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변경 의사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쪽 2번은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3쪽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 유사성 검토인데요. 이게 일반회계,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에 보면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입주 경력 7년 이내의 예비·초기 창업자로 한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무상 사무공간하고 창업교육 등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실제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38개의 다른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2025년 실행 내역을 보면 투입에 비해서 주로 인테리어 공사 정도 하고 주로 시설 위주로 관련돼 있는데,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거나 운영 주체를 중기부든 아니면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하고 통합을 하는 등의 제도개선,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부승찬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오늘 오전 중에 부승찬 위원이 제도개선 형태로 의견을 변경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연례적 예산전용·세목변경 주의 필요 내용입니다.

이게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일반회계 사업인데 이게 2025년에 보면 열여섯 번이나 전용하고 세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연말에 집중되고 특히 청년소통채널 행사 이런 걸 보면 3년 연속 연초에 일반수용비를 용역비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수용비를 용역비를 전환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비목에 맞게 집행된 금액을 보면 약 5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3년 연속 연초에 세목을 임의 변경하는 부분을 조심해라, 소홀한 예산 관리 책임을 물어서 엄중 조치하라고 부승찬 위원은 징계를 요구했었는데 이 또한 오늘 오전에 주의 형태로 낮추는 형태의 의견 표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위원은 적정한 비목에 반영해서 편성하라는 형태로 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엄태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수석전문위원 설명할 때 부승찬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인가 의견을 바꿔 냈고 정부 측에서 수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런 건 다 수용으로 치고 이 뒷부분은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국토도시실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도시실도 지금 자료상에는 5페이지에 들어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구용역 사업인데 이것도 김미애 위원이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도 김미애 위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쪽 보시겠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개도국 지원 사업, ODA 사업입니다만 전액 국제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누적 실행행액이 19.43억 정도에 그치는데 전체 5년 사업 기간 중에 남은 17개월 동안 현재 총사업비가 40억 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50%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체계를 잘 구축해 보라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부승찬 위원은 제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용합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내에 내역사업 등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실행행액이 391억 정도에 그칩니다, 전체 예산 550억 중에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실적이 조금 미흡한데도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국비를 일괄적으로 교부하게 되니까 국비 교부 이후에 새롭게 유인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실태조사를 확인했더니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적발 실적이나 회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김미애 위원 등이 주의, 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부승찬 위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련 책임자 문책…… 이것도 부승찬 위원은 주의 형태로 낮출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도개선 또는 수정 등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7번, 9쪽에 8번·9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10번 생략하고요.

11쪽입니다.

1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제도 개선입니다.

이게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12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인데 이 중에 542만 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210만 필지, 한 38.9% 정도, 예산집행 기준으로는 한 33%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1년부터 사업시행자한테 수수료를 조금 감면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공공, 민간도 들어오고 하니까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하거나 주의를 주기 위한 시정요구유형을 김종양 위원 등이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께서도 오전 중에 주의를 요구했던 부분을 제도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하는 걸로 하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쪽, 이것은 수용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15번 보시겠습니다.

국토지형관리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변경 관리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오전 중에 김미애 위원이 철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넘어가겠습니다.

16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7쪽 보시면 보조금 실집행 관리 및 일률적 교부방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건축문화진흥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을 보면 그 안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 6억 원 중에 실집행액이 2억 7800만 원 정도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부산하고 충북 청주는 전액을 미집행했고요. 경기도 양주는 23%밖에 미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교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교부하고 실효적인 조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20번 생략하겠습니다.

18쪽, 21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 운영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불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시 소장품 확보 사업이 4년간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산출 근거 등을 재산정하고 불용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조금 실적을 계량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입니다.

부승찬 위원은 시정, 김미애 위원은 제도개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택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23번, 연례적 집행 부진이고 추경 증액예산 불용 문제입니다.

이게 건축안전 내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추경으로 12억을 증액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또 24억을 불용했습니다. 추경 증액분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불용한 것은 사실상 예산집행 가능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2020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를 부승찬 위원 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번·2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26번입니다.

해안권·내륙권 발전사업 실집행을 제고 관련입니다.

해안권·내륙권 사업 2025년도의 예산현액이 177억 1200만 원인데 국토부 단계에서는 전액 집행됐습니다만 연례 내역사업 실집행률을 보면 30% 미만입니다. 이 중에 10개 사업은 실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집행률이 저조한데도 12월에 남아 있는 국비를 전액 교부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실집행률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집행이 낮은 사업을 조금 조정해라 또 예산을 감액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부승찬 위원 등이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생략하겠습니다.

21쪽, 28번·29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정요구사항의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보다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7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시정하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장종태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일치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21번·22번 박물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역시 부승찬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셨고 김미애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사업 예산편성 시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부승찬 위원님 시정, 장종태 위원님 주의, 제도개선 정동만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조인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조인철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위법·부당한 사실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부분 지적된 사항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측 의견을 받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 다 수용하고요. 질문 하나만……

11쪽 11번이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서울의 경우 지정률이 2.7%, 완화율이 1.9%, 전국 평균보다 형편없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정상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 끝내는 거잖아요. 끝낼 수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

누구 하세요, 아시는 분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좀 어렵고요.

○정일영 위원 어렵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예, 예산도 그렇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제4차 기본계획 바뀔 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다 보니까……

○정일영 위원 서울시 협조 이런 게 필요하진 않나요? 필요하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그렇지요.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고요.

○정일영 위원 서울시 잘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기존 사업들을 잘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시정, 주의를 거의 제도개선 쪽으로 정부가 많이 요청하셨고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김은혜 위원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엄태영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차관님, 5페이지에 국토정책지원 예산 감액 산출근거 제시 그다음에 14페이지 국토지형관리 사업의 예산편성 및 내역변경 관리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김미애위원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곤란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까, 아니면 원래 수용 곤란하다고 국토부 의견을 내신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철회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수용 곤란이 원래 정부 입장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철회가 먼

저였던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수용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철회로 해 주셨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페이지에 예산 79.7% 감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게 수용 곤란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구수요 재산정이 수용 곤란하셨던 거예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예산 때문에 12억이 올라간 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올해 끝나거든요. 올해 끝나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예.

○**김은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수용 곤란하다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수용 곤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입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86.4% 증액 편성에 대한 내역변경을 요구한 것은 왜 수용 곤란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에 수용 또는 수용 곤란으로 일괄적으로 통일돼서 적게 작성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수용 못 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사업 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예산의 집행,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수용 곤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사정 변경이 좀 있었고 그렇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셨고……

○**김은혜 위원** 주의까지 가지는 않아도 국토부가 열심히 잘하겠다 그 말씀 하셨다 이 겁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정의경** 그렇지요.

○**김은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것만 유독 수용 곤란이 많아서 여쭙봤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다 정리하고 주택토지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 소관 35건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회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인데요. 내역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매입임대 사업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 개발 등 이렇게 주거급여와 관련 없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에 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런 것

은 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변상하라는 부승찬 위원 요구도 있었고요. 또는 문정복 위원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승찬 위원은 ‘변상’ 부분을 ‘시정’으로 의견을 낮춰서 오전 중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비비 신청 집행관리 이것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내역인데요. 2025년 11월 27일 서울시에 예비비 155억 67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 제출한 집행실적은 예비비보다 많은 219억 정도의 불용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최종 정산은 올해 7월에 해 보니까 92억 4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예비비가 불용됐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더군다나 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자체 실집행 잔액을 보니까 서울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남았겠습니까만—619억 6100만 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편성 필요성이라든가 소요 추계의 정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도 정확하게 하고 보조사업에 맞게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로 부승찬 위원, 문정복 위원이 시정, 김미애 위원은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3번입니다.

위탁계약 이후에 재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토교통부하고 위탁계약을 2025년 6월 26일에 체결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주)유플러스아이티라는 회사와 재위탁 수의계약으로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개선하라는 취지로 제도개선, 이것도 자료는 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승찬 위원이 제도개선으로 낮춰 줬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시고 27쪽 보시겠습니다.

9번입니다.

과도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추경 증액 및 집행관리 개선 필요 내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반회계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 지원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또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또 추경까지 통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사업관리가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1차 지원자를 보면 기간연장 지원을 7만 6000명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만 명 감소했고 2차 지원할 때 보면 5만 4000명 예상했는데 12만 7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발행한 건데도 소요를 면밀하게 산정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상범 위원은 제도개선, 김미애 위원 등도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래 10번입니다.

부정수급 환수 노력입니다. 이것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억 925만 원인데 환수비율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회수 절차를 즉각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미편성 신규 사업 전용 문제입니다. 이것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세부사업에 들어 있던 자치단체 이전 목을 연구용역비 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 또는 제도개선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용역 선금지급 규정 준수 및 관리강화 필요 사업인데 이것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조세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7127만 원 했고요. 이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반하는 측면도 있고 선금이 이미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정복 의원은 당초 시정이었다가 제도개선 형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분할교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지자체 보조금을 분할교부하지 않고 4개 시도를 제외하고 연초에 일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큰 규모로 반납되고 2025년 지자체 실행행률이 46.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의 원칙상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교부하지 말고 단계별로 잘 검증해서 집행해 가지고 연말에 일괄 반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30~31쪽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보시면 부동산 전자계약 수요 증가를 반영한 집행관리 필요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인데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자계약 체결 시에 연동돼서 발생하는 운영비가 증가해서 3억 3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미 전자계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데 수요 증가를 잘 반영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승찬 의원은 문구 수정 정도로 낮춰 줬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보시면 정부의견이 처음의 제도개선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했을 정도로 정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오히려 제도개선보다 높은 시정요구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33쪽입니다.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보완 사업입니다. 원래 개발앵커리츠 사업이 사업성은 좋은데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동산개발사업장 이런 데 먼저 공공이 선투자해서 민간대출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2025년도에 2000억을 전액 출자했는데 실제 사업장에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회수, 채투자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 돈이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 회수 상황을 잘 관리하고 유예기간, 연체 등을 엄밀하게 하라라는, 단계별로 관리하라는 취지고 그다음에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데 균형 개발 차원의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니까 지

방도 잘 살펴보라는 내용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니까 엄밀하게 재원 관리하라는 취지로 하면서 시정 요구, 그다음에 장종태 위원은 시정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제도개선,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 넘어가겠습니다.

35쪽에 유휴 물납토지 매각 및 임대 활성화 필요인데요.

지역균특회계,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사업인데 물납토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되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데 매각이 어려운 토지의 임대·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라는 취지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가 수용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형태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내역 국회 제출의무 준수 필요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특정한 시기에 적어도 국회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제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70조에 따른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위원은 시정입니다. 절차법 위반이니까 사실상 시정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종태 위원은 제도개선 형태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37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확대 필요 내용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또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인데요. 2025년 6월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대출공급을 축소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액 14조 815억 원 중에서 4357억 원만 집행합니다. 집행률이 약 3%에 불과합니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직접융자하고 다르게 기금으로 회수가 안 되니까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만 사실상 이차보전금 수익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주의·제도개선으로 부승찬 위원 등이 요구를 했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제도개선 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인데요. 2025년에 3000호 매입을 계획했는데 456호 매입에 그쳤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설정 단가를 보면 분양가의 50% 정도로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에 단가를 60%로 인상했지만 이미 선정된 사업장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사업 구조상 매입신청 유인이 낮아서 더더욱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업 실적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장종태 위원 등이 요구를 했습니다.

39쪽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미회수 방지대책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융자) 사업인데요. 임대사업자들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서 토지공사 임대보증금을 회수를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2281건, 146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미회수 보증금의 회수·방지 대책을 잘 세우라고 시정·주의·제도개선 형태로 문정복 위원 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26번입니다.

전세임대 입주실적인데요.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됐는데 실제로 입주하는 비율을 보니까 한 50% 내외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원인을 잘 살펴보고 입주지원 방식을 개선해 보라는 취지로 황운하 위원 등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1쪽, 28번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의 다가구매입임대 용자 또는 출자 사업인데 기축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전체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축 약정매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LH 가 보니까 계획상 19만 3940호 중에 6186호가 장기 미임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830호는 1년 이상 공실입니다. 이것은 입지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매입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후에 하자 수선도 보면 중대하자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품질관리가 미흡하니까 입주를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정매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는 하되 입지, 실제 임대수요를 잘 파악하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 보수도 잘해서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라는 취지로 황운하 위원과 부승찬 위원 등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 31번 보시겠습니다.

출자금 환원 방식의 예산편성이 적정하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 통합공공임대 용자·출자 사업인데요. LH 입장에서 보면 사업승인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출자금을 이월, 불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차년도 신규 출자금에서 상계하는 환원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환원 규모가 2025년 2조 4000억입니다. 그래서 약 2.5배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가재정법상의 이월 제한 취지를—가급적이면 이월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우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투명성을 저해해서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정복 위원은 문구수정을 해서 의원실과 정부가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5쪽입니다.

사업성 개선, 홍보 강화 집행실적인데요. 이게 주택도시보증기금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용자사업입니다. 2025년 용자사업 예산액이 400억인데 조합이 4개밖에 불과하지 않으니까 45억 정도만 집행하고 354억을 불용했습니다. 불용률이 88.6%입니다.

이게 물론 2025년도에 신설된 사업이니까 인지도도 낮고 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용자조건이 불리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특판금리는 1.0%인데 주택도시보증기금 조달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금 재정 적자 역마진을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부승찬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님은 처음에는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낮추고 김종양 위원 등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22페이지 첫 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신청 및 집행관리 필요도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정수급 환수 강화 필요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신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2번 용역 선금지급 규정 준수 및 관리강화 필요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9페이지 13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분할교부 필요 역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32페이지 16번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수요 증가를 반영한 집행관리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 33페이지 17번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 보완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36페이지 21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 국회 제출의무 준수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25년 변경내역을 26년 1월에 일괄 제출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시고 장종태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38페이지 24번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대책 마련 역시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5번 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미회수 방지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입주실적 제고 필요 역시 전세 입주실적 제고를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28번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필요 역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31번 출자금 환원 방식의 예산편성·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에 대해서 문정복 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시정요구 주의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35번 정비사업 조합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이것은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리로 용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승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차관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이상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거 이견이 없고요. 다만 두 가지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27쪽의 연번 9번, 청년 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5%에 해당되는 257억 4900만 원이 불용된 게 맞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앞에 설명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반대 같아서, 그러니까 그 윗줄에 보면 2차 신규지원 선발인원이 5만 4000명에서 12만 7000명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12만 7000명을 선발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선발한 거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또 3만 명이 감소했는데 예산이 부족했고 뒤에 2차, 2차 이것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예산이 불용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12만 7000명이 선정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요건이 부모와 독립하여서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고 중간에 부모랑 같이 살도록 하는 합가가 되거나 아니면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일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선발은 많이 됐는데 자격 검증이나 그 중간 단계에서 자격을 상실한 거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월세를 내지 않으니까……

○정일영 위원 오케이.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그런데 45%에 해당하는 257억 4900만 원이 결국은 안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못 쓴 거지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

습니다.

○정일영 위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라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걸로 보여서 그래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청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국은 나중에 자격 상실이 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두 번째는 37쪽의 22번인데요. 주택도시기금, 이것 제가 어저께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결국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중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한 70% 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30% 정도 됩니다.

○정일영 위원 30?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청약저축이 있고 주택채권도 조정이 됐고 해서요.

○정일영 위원 채권이 있고요. 2개 합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게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한 60%, 한 7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세수결손이 2년에 걸쳐서 한 100조 난 걸로 생각해요.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9조인가, 정확한 액수가 한 몇 조 되는데 9조 정도 되는 그것을 그쪽으로 가져갔는데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그 재원의, 그 돈의, 예를 들어서 저도 1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지요, 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린 거야. 그렇지요? 말하자면 주주라고 그럴까, 예금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기재부에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지금 돌려받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하고 현재 이자율은 3.4%인데 이자 해 가지고 항상 1년마다 돌려받습니다.

○정일영 위원 돌려받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정일영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프로세스가 이상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이 주택도시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주택 전월세 등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돈이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재정당국하고 적극 협의해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총량을 좀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위원님 그다음에 문정복 위원님, 김남근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저도 37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취지를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쳤던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과 실적이 지나치게 괴리가 벌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차보전이라는 정책 수단에 지나치게 집중한 게 기금의 건전성을 걱정하셨다면 이차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데 차관님, 이차보전 상환금은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실장이 답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회수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차보전액은 전액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런데 그 조달비용 부담이 나중에 국채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지는데 이거는 방법의 문제이지 재정부담이 이차보전은 덜하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짜서 국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청년 정책대출의, 디딤돌이든 버팀목이든 생애최초든 이게 저는 물가 현실에 맞게 소득 요건을 상향해서 기금의 직접 용자 집행률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주택도시기금도 10조에서 14조로 늘어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제도개선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요구로 상향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거주지에서 내 집 마련이나 전세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신혼가구나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효능감이 높은 정책대출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금의 직접 용자를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위원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요자 대출, 그래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나가는 게 23년에 47조, 24년에 54조 그리고 작년엔 34조입니다.

또 여유자금도 저희가 한 10조에서 14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약저축 해지라든지 또 국민주택채권 반환을 위해서 한 8조에서 10조의 여유자금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금으로 다 나가 버리면 바로 기금 운용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재정당국하고 해서 공자기금 예탁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기금의 직접지출을 늘리려고 하지만 현재 수요자 대출이 굉장히 많고 기금의 여유자금은 10조에서 14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운용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은혜 위원 나중에 국토위 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약간 딜레마를 말씀

주신 거예요, 실장님. 지금 청약에 비과세도 폐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약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불신하고…… 청년들도 청약으로 이제 집 못 얻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책으로 청약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비과세 폐지하면서 기금이 부족할 거다 얘기하는 건 조금 딜레마가 있지요. 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관련된 말씀을 하시겠다니까 바로 이어서 엄태영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엄태영 위원 앞의 질의 순서에 이거 하지 못하고 중간에 김은혜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정책적으로 대출 공급을 축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4조가 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예산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일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처음에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정책대출이 확 줄고 그렇게 되면 마무리 잔금까지를 은행대출로 꼭 계획했던 사람들이 그냥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 때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되는 아파트만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문제 풀이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라든지 대출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지금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처음에 신청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경우는 그래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진행됐던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진행됐던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대출로 예상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같이 처음부터 놓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큰 문제가 발생해서 주택시장, 특히 수요자들의 혼란을 크게 초래하고 그에 대해서 막막한, 그야말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국토부가 막아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시정이나 제도개선 이 일을 떠나서 반드시 국토부가 정책이 변경될 때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반영하고 정책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는 금융위 입장도 존중하지만 실제 수요자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계 사업자단체 그리고 관계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정복 위원 27쪽에 연번 10번을 봐 주십시오. 이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억 925만 원, 그런데 환수비율이 35.5%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 환수액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부정수급의 유형을 알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청년주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원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됐는데 부모와 합가를 하게 되면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급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계속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돼서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황이 어렵거나 그래서 환급을 못 하는 게 아닐 건데 환수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저희가 지자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계속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자체에서 업데이트를 받아 보면 55%, 60%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환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이양사무예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이양사무는 아니고 지자체 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로 신청을 하고 지자체에서 나가고 저희가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무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지자체 중에서 이 환수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자체가 별도로 순위별로 매겨진 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순위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 대 7로 국비가 3으로 들어가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5 대 5로 국비가 5가 들어갑니다.

○**문정복 위원** 지방정부와 5 대 5라고 하면 이것을 환급하는 것도 본인들의 자체 수입에 도움이 될 텐데……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데 생계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이게?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장 김동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 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근 위원** 1번·2번 주거급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정 부분들을 수용하셨는데 시정이라는 거는 위법사항이 상당히 중해서 그에 따른 추정·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 같은 것들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을 수용하실 때는 그냥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어떤 조치를 수반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1번·2번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수반해야 됩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7쪽 22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정부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새로

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대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이제 쓰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정책 변경이 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정책 변경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정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3%밖에 안 되고 10여 조가 넘는, 11조가 넘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정부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첫 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주거급여 지원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방식대로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김남근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을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사업 집행을 할 때 주거급여의 목적에 맞게만 쓰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니까 목적에 맞게 안 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시정에 대해서는 추정·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실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앞에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하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앞에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금 반환보증이라든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지 특화주택 이런 쪽의 다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신청 관련인데요. 주거급여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별 수급자 수하고 평균 급여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려 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다 추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비비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사업추진 방식들을 바꿔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추계하는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부족한 것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재원 예산을 불용한 게 당초에 수요자 대출 들어온 거를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직접 지출을 하면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34조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수요자 들어온 걸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자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소득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 이차보전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음으로 해서 기금의 건전성은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보전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목은 지금 직접대출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직접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 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기금의 여유재원이 한 10조에서 14조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 대출 나가는 게 47조, 35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기금에서 직접대출은 못하고……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직접대출 확대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사업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이차보전 방식을 하되 최대한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기금 예탁을 줄인다든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나중에 한번 그건 우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변경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를 하자면 1번 사업은 시정으로 정리했고 2번 사업은 시정 및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3번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되었고 9번부터 13번 사업은 역시 제도개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5번 사업은 철회가 있었고 16번 사업은 정부 의견대로 문구 수정 반영해서 주의로 정리합니다.

17번 사업은 시정과 주의 중에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의견은 제도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번 사업은 정부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고.

21번 사업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의견은 주의로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정부 의견대로 주의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2번 사업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한데 김은혜 위원은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부대의견은 신혼가구 및 청년층이 서울·수도권 등 실제 거주지에서 내 집 마련 및 전세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물가 현실에 맞게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기금 직접융자 집행률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23번 사업은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으로 하향 요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번 사업은 시정·주의·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26번 사업은 주의·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하고 28번 사업은 또 역시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논의가 필요한데 25·26·28 사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으로 이 역시

하향 결정을 할까 합니다.

31번 사업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45번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운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황운하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위원장님, 22번 김은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방식은 사업방식 개선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대의견으로 다신 부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소위원장 염태영** 그러면 김은혜 위원이 말씀하신 22번 사업은 부대의견을 반영하면서 정부 측 요구대로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태영**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건설정책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SOC안전정보시스템(정보화) 사업은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쪽,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보완 관련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수단 마련 관련 사업입니다.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일반회계상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체납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기계임대료 체납금 회수율이 2025년도에 4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 결산심사 시에도 시정요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담인력이 종전에 3인이었는데 현재 2명으로 축소돼 가지고 오히려 임금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데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회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성과도 좀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장점검, 단속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등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제도개선 또는 주의 등으로 김미애 위원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입니다.

상용임금 예산편성 개선인데요. 이게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 일반회계사업인데 정부 해외인프라 수주활동 내역사업에 보면 아랍어 자문관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보수 지급할 때 계속 연례적으로 고용부담금이나 상용임금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용 관행을 조금 개선하라는 취지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부승찬 위원 등의 요구가 있

습니다.

50쪽 지반탐사 공동 복구 사업은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연례적 이월 및 세목조정 근절인데요.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사업인데 2호를 보면 정책 연구용역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개 3600만 원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것 2022년 이후로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국토위 결산심사 시에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세목조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료는 연말에 세목조정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의견이 명확하게 없습니다만, 김미애 의원은 일부 철회도 했습니다만 정부 의견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수용해서 철회하는 걸로 할지 이것은 위원님들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3쪽 부대의견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김은혜 위원이 얘기했던 부대의견 포함해서 여기에 여러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정부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5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무재산 채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를 이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을 연계하여 수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부승찬 위원이 부대의견 안을 냈었는데 여기에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과 협조해서 미수납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형태로 조금 수정하게 되면 정부가 수용한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48페이지 3번입니다.

건설기계임대료 채납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수단 마련 필요에 대해서 수용하고 제도 개선과 주의에 대해서도 저희는 주의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상용임금 예산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51페이지 연례적 이월 및 세목조정 근절 필요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53페이지 부대의견 5번, ‘국토교통부는 무재산 채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를 이행하고……’, 그 뒷부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을 연계해서 수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등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과 적극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차관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임태영**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 다 동의하고요, 부대의견도 좋습니다. 좋고……

수석전문위원님, 1번하고 2번 쪽 시정요구 유형 이것은 다 철회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번, 2번은 그대로 제도개선인데 정부가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일영 위원 위에도 제도개선이고 밑에도 제도개선이고? 위에 칸이 5개씩이나 있길래, 앞뒤로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1차관 소관 여러 가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은 78%가 삭감이 되었어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전환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신규 지역을 마흔여덟 곳 선정해 놓고 예산 삭감으로써 매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 예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있는데, 아무튼 신규 선정 후에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세밀한 재정 계획을 좀 수립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들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 우려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아무튼 신규 지역이 전국에 마흔여덟 곳인데 선정해 놓고 예산이 거의 78% 삭감이 되니까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정된 곳은 일단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염태영 위원 부대의견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부대의견?

그러면 22번에 대해서 염태영 위원님 부대의견 말씀하신 것 이해하시지요?

○염태영 위원 아까 김은혜 위원이 부대의견 달기로 한 건데요. 거기다 추가해서 대출 총량제…… 대출 축소가 이루어질, 이를테면 잔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아까 김은혜 위원의 부대의견 달 때 같이 하라고 하는 요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포함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 문제는 정리해 주시는 걸 전제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희가 정리해서 행정실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22번 사업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염태영 위원 부대의견도 추가로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임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국토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심사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교통물류실 소관 시정요구사항 10건인데 이중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은 5건입니다.

1번, 물류산업지원과 관련하여 물류선진화 정책연구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유사한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산업지원 사업에서 한중일 복합운송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회의 개최 및 해외 참석 실적이 당초 계획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 시정과 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요건 유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대상, 실시 건수, 요건 미달 확인 사례 및 취소·정지 등 이와 관련된 조치 실적을 공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예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에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률이 65.3%에 그쳐 약 1만 8000여 대가 운행기록 제출 의무를 미준수한 데 대해서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모바일DTG 보급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의 문제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지자체 보조와 수요가 잘 연계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각각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요구된 바 있고 정부에서는 마지막에 황운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문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 2차관 홍지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정하고 주의를 제시하셨는데요. 저희는 주의로 수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물류산업지원 반복적 임차료·국외업무여비 불용 및 예산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주의를 주셨는데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쪽, 우수물류기업 인증 사후점검 예산의 반복·이월 및 점검 실적 미확인 시정 필요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증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저희가 이미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쪽의 교통사고예방지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은 시정부부터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까지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지막의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다음,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정복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8쪽, 제도개선으로.

○정일영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11쪽입니다.

항공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연번 7번에서 관련 소송 판결 직전에 전용을 통해 토지매입한 데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을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철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신에 앞 페이지 6번에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의견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연번 2번과 관련하여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

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각각 징계와 주의에 관한 시정요구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항개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제출한 집행 계획서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불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월을 해서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변경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를 적기에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각각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부진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주의와 제도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이어서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적기 준공을 위한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대해서 징계·주의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인해서 공사 중지 및 재발주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현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는 행정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입니다.

공항개발조사와 관련해서 시정하고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입니다.

시정하고 징계·주의·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가 행정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번,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기조치된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재조사 요청에 따라서 이미 관련 담당자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번 10번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관련해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타당성재조사를 올해 8월 3일에 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정부 측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차관님, 새만금신공항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서산공항, 4개 집행이 다 부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특히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좀 자세히 한번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23쪽,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은 7건이 제기되었으나 수정의견이 있는 것은 29쪽 1건입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중에서 정부의 구상채권 미수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련해서 각각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요구를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장기채권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채권 연령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업무 처리 규정을 올해 3월에 완료를 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 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30쪽, 도로국 소관입니다.

도로국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11건 제기되었으나 정부 수정의견이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먼저 자료 31쪽입니다.

2번, 고속도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 자부담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실집행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각각 있었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연번 8번, 위험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위임국도의 집행률이 일반국도보다 낮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연번 2번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고속도로조사 관련 건에서 시정과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연번 8번입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위험도로 개선 사업 정비에 대한 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국토부에서 도로분야 연간 예산액이 얼마예요? 7.5조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철도는 얼마예요? 두 가지 답만 주세요, 도로·철도 연간 예산. 2025년이든 26년 올해든.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도로는 한 오륙 조 정도 되고요.

○정일영 위원 여기 도로 계정이 7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륙 조가 아닌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7조가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철도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8조가 좀 넘습니다.

○정일영 위원 철도가 많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지금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설 철도·공항 이런 사업에는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면서 국민이 매일 활용하는 그런 위험도로 개선에 한 1000억 원대 예산만 투입되고 심지어 전액 집행도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저희

가 보니까 거의 절반만 집행하고 44.3%는 이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개선 위험지점 현황과 연차별 해소 계획 또 이월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안전에 대한 위험도로 사업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SOC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계없이 위험도로 개선에 대한 예산은 증액해서 또 집행률도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거의 다 채울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41쪽입니다.

철도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4건인데 이 중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은 2건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연번 3번, 철도사후관리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이미 반영된 사후환경영향평가비를 별도 사업에 중복 편성·교부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각각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연번 11번, 민자철도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계 철도노선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데 대한 지적으로 각각 시정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 43쪽입니다.

예산편성 중복 관련해서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요구를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철도공단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총사업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총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연번 11번입니다.

민자철도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점에서 배상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조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44페이지, 연번 4번 예타지연 관계인데요. 예타가 최근 5년 동안 21건 중에 14건이 24개월을 초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타는 기재부,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예타 얘기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최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년 동안 21건, 14건 그 내용하고 얼마만큼 초과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쥬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없으시면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55쪽, 대광위 소관입니다.

대광위 소관 시정요구사항 7건 중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된 건은 3건입니다.

먼저 자료 55쪽 연번 1번,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의 연례적 이월에 관한 지적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자료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2층 전기버스가 적게 생산된 데 대한 지적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료 58쪽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사업자가 해당 지방비 부족분까지 이용자에게 선지급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환급금 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미정산된 지방비 부담분을 조속히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연번 1번, 55쪽입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 지원 관련입니다.

정산 절차를 고려해서 12월 운행분은 앞으로는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번 2번입니다. 광역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례적 이월이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연초부터 지자체 내 부서 간의 협업을 독려하는 등 지방비 편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번 4번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관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주의를 주셨는데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 56쪽 2번, 2층 전기버스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현대차 거기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중국산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예산도 제대로 안 쓰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것 계속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건 담당 대광위 상임위원과 한번……

○**정일영 위원** 누구든, 잘 아시는 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후부 보조금이 있고 또 저희 저장버스 보조금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면서 조금 부서별로 잘 안 맞아 가지고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현장에서는 지자체 문제도 있지만 현대차 같은 데에서 생산을 잘 안 하는, 꺼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오고 또 나중에 고장 문제도 있고 등등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논의를 앉겠는데 나중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정책인데 지자체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리고 생산량에서, 공장에서 또 수입 물량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시고 자료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 박지홍**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더 의견 있으신 안 계시면 또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62쪽, 항공교통본부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자료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63쪽의 시정요구유형으로 부승찬 위원님께서 당초 징계를 요구하셨는데 주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건 모두 정부 수정의견이 있어서 2건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연번 1번과 관련하여 항공교통본부 인건비는 항공교통본부가 일반연구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자체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이용을 했다는 데에 대한 지적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 이·전용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를 증액한 데 대한 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주의로 바뀌서 시정과 주의가 각각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62쪽, 연번 1번입니다.

시정, 주의 각각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63쪽입니다.

항공교통본부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주의, 시정, 주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주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의견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오세일 64쪽, 공공기관 관련 1건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출연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 수탁에 대해서 사무편람을 구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94개의 국가수탁사무 중에서 49개 사무에 대해 사무편람을 구비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입니다. 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편람이 구비되지 않은 49개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20개의 사무에 대해서는 승인을 완료했고 4개의 사무에서는 승인 중이고 또 나머지 25개의 사무에 대해서도 승인 완료를 위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편람을 작성·시행토록 정기 점검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마지막으로 65쪽,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는 당초 22건의 부대의견이 적시되어 있으나 오전에 66페이지 연번 11번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의 연번 16번, 17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의 연번 17번입니다.

GTX-C 노선에 대해서 천안·아산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정식 편입해서 타당성 검증 및 설계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GTX-C 연장 사업에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본선과 동시에 개통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원인자부담사업 추진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GTX-A, B, C 동일하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요 정부에서도 일괄로 추진 계획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정 노선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타 원인자부담사업과 형평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철도망에 반영을 시키고 특정 노선에서 국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타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또 예타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입니다.

국토부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7년 완공을 목표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 신창역 일대의 환승주차장 확장과 서틀 연계망 구축 등 주민편의 개선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를 좀 일부 고쳐서 주민편의 개선 사업을 적극 검토한다는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국토위의 민주당 간사이신 복기왕 위원이 내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으로 말씀하셨는데 복기왕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하시고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또 부대의견으로 황운하 위원도 많이 내셨는데 황운하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황운하 위원 예.

○소위원장 엄태영 다 수용을 하셨으니까 일단 의견 없으신 것 같아요.

김미애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지역구에 대한 것을 부대의견을 내셨는데 지역구 얘기해서 좀 그러시지만 그래도 수용하신다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김미애 위원 적극 검토한다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엄태영 다음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태영 위원 67페이지, 16번으로 표현된 ‘국토교통부는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위해 국비 지원 광역철도 사업으로 정식 편입하고’ 한 것이 현재는 그러니까 천안·아산 연장까지가 철도 연장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망에 반영을 안 시켜도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표현이 전제된 게 없어서 노선이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GTX-C 연장은 24년에 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 영역을 마무리해서 그다음에 24년 말 경에 지방재정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하고 지금 투자심사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이 GTX 본선과 함께 같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국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5차 망 반영부터 해야 되고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전부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사업 반영의 불확실성까지 있어서 실제 화성이나 평택 같은 데에서는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게 좋겠다 의견도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반영해서 이게 전체가 떨어지기보다 국비 지

원 광역철도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뜻, 검토를 해 본다는 뜻도 반영할 수가 없나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저희로서는 이거는 전체 원인자부담하고 연계된 거여서 이제까지 비수도권의 상당히 안 좋은 지역들도 다 원인자부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국비 지원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염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복기왕 간사님의 사업인데 그냥 떨어내는 게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검토하는 것조차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뜻은 정부 측 의견이라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염태영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KTX-이음에 기장역·센텀역에 대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중앙선 KTX 이음이 생기고 나서 단양팔경의 고객이 한 2~300%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단양을 많이 찾는데, 하여튼 KTX 이음역이 참 얼마나 효율적인지 중앙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따라서 단양역의 정차도 앞으로 천만 관광객이 몰리니까 특별히 정차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소위원장 염태영 김미애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제때 못 드렸는데 이게 상행·하행 한 번씩인데 예약이 너무 힘들고 상당수는 정차역에서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증차를 위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 검토를 할 때는 딱 그때만 확인할 건데 예약을 시도를 했으나 못 한 것 이런 것까지 혹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있나요, 하고자 했으나 못 하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지금 중앙선이 25년 12월에 고속화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개 역을 증차한 상태고요. 저희가 앞으로 수요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연계 교통 노력 같은 것, 버스를 잘 연결한 다라든지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같은 걸 봐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증차가 돼야지 정차 횟수를 늘릴 수 있고 현재 상태로는 더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역 코스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여행 다니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증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염태영 하여튼 그 부분은 작년 예로 봤을 때 코레일 국감 때 주요 노선에 대한 예약률이 어느 기간에 다 집중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도 아마 또 비슷한 얘기를 위원들이 하실 것 같은데 여튼 차관님께서도 미리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KTX가 편리한테 보름 전에도 예약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또 대책이 뭔지 미리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운하 위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그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트램의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 비율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도시철도라서요. 지금 대광위 업무인데 보통 도시철도가 60:4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이 트램이 투입되는 재정만큼 교통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이걸 전면 재검토 등 포함해 가지고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 공정률이 얼마큼 되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대광위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 박지홍 24년에 착공해서 현재까지는 28년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공정률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어쨌든 만약 과거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조 5000억 규모 되잖아요. 이렇게 대규모의 1조 5000억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 진행되다가 완전히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투입된 국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자체에서 전액 국고에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 박지홍 지금 말씀해 주신 과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투입된 국고는 또 어떻게 처리될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과거 사례가 있는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게 중단된다면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투입된 국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 박지홍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인데요. 아까 45페이지 산악용 전기 열차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현재 시정, 주의, 제도개선, 3가지 의견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시정으로 수용하는 걸로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사실 이미 정산, 환수 조치도 다 끝났고 지금 제도개선 방안까지 다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면 저희가 이걸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공모할 때 신규사업을 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문정복 위원 저희 2차관실에서 하자는 건 다해요.

○정일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태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워낙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가지고 아주 큰 이견과 또 별도로 보류 심사도 없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의원실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속에 그래도 예상보다 빨리 12시 20분 지금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남근 김미애 김은혜 김종양 문정복 엄태영 염태영 전용기 정일영 정희용
조인철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원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항공정책실장 정채교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도로국장 김효정

철도국장 김태병

정책기획관 이주열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단장 성호철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형욱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
기획조정관 정인권

임시회의록